第259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國 會 事 務 處

2006年4月11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 1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10시0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계속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러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하여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의 권오을 의원입니다.

최근 론스타니 뉴브리지캐피털이니 외국 투기자본이 마음 놓고 소위 먹고 튄다는 '먹튀'를 해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뒤늦게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더욱 오죽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말만 앞세운 허장성세의 우리의 국정운영 방향,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책임을 그리고 대통령이 말과 실천이 다른 그 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차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는 자주외교, 동북아 균형자, 대일 강경외교 등 강한 수사를 사용해 자주적·적극적 외교를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 말을 하겠다'라며 국민들을 호도했던 참여정부는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말과는 다르게 지난 정권보다 더더욱 대미 종속외교, 대일 굴욕외교, 그 다음에 대중 눈치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동북아시아 균

형자 역할론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유효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현재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저희 외교목표하에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을 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외교 과제들을 현재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결과적으로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설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우리가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

○권오을 의원 그러면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외교정책을 수행한다면 기존으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외교 관계, 한미동맹이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일탈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 또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상대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 외교정책의 현주소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 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9일 참여정부는 한미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1차……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둘 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님의 그러한 국정 철학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년 1월 전략대화를 가졌고, 그 결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권오을 의원 현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권오을 의원 첫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만약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에 긴장 관계가 발생하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동성명에서도 밝혔던 것과 같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의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전략적 유연성을 앞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지금 말씀하신 대로—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을 의원 존중한다고 외교적 언사로 이야기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우리도 미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그랬고……

○권오을 의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만약 동북아 역내 지역에서 각국 간의 긴장 사태가 발

생을 했을 때, 그리고 주한미군—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상호동맹조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호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권오을 의원 합의하지 않으면 못 옮기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권오을 의원 두 번째, 설사 백 보 양보해서 어떤 기동군화 전략에 의해서 그리로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백으로 나타나는 전력 증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간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행하도록……

○권오을 의원 결과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 다르고 장관 말씀 다르고 각 부처 말이 다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보면 일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둔 해병 원정대에만 완전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본토 내에 있는 어떤 미군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을 들어서 사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주일미군 성격과 주한미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따른 구체적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일체 상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권오을 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특히 동북아 역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북아 역내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리고……

○권오을 의원 지난번에 이라크전쟁 때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로 옮겨 갔습니다. 우리도 이라크로 파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물론 외교적 언사로 포장이 되고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3조 위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어떤 전쟁—남북한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반 장치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역내 지역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데 따른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또 합의해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오을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3월 16일날 노무현 대통령은 “야스쿠니신사 내의 군사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권오을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3월 17일날 총리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곳 어디든 방문하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권오을 의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그 야스쿠니신사에 병설된 전쟁박물관인 류슈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특히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왜 신사 참배를 그렇게 반대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게 할 수 하는

방안으로서 일본 정부가 방문을 제안하면 가 볼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겁니다.

○권오을 의원 그러면 현재 외교부 차관께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류슈칸 박물관을 방문하셔도 좋다 그런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 목적이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본 측이 제안한다면 양 정상이 류슈칸을 함께 방문해서……

○권오을 의원 차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류슈칸 박물관을 참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아닙니다.

○권오을 의원 앞뒤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참배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목적이 그 야스쿠니신사가 뭐라는 것을 일본 국민이 좀더 알게 하도록,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일본 국민이 알게 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한번 가 보자는 것이지 그건 참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권오을 의원 아니, 그러면 일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는지, 류슈칸 박물관이 뭐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권오을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것이 정말 앞뒤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외교부가 전부 다 전문 직업외교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오을 의원 류슈칸 박물관 방문하고 싶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방문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에 역사 인식에 대한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야스쿠니신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많은 일본 국민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일본 국민에게 비쳐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지 무슨 참배한다거나……

○권오을 의원 1년 전으로 돌려서 말입니다. 2005년 3월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과 금년 3월에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1년 전에 왜 그렇게 이야기하신 줄 압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4·30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해서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러포트 물러나는 사람이, 다음에 일본 외교문서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그렇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기록을 위해서도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의 류슈칸을 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일본이 제안한다면 가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권오을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내의 군사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권한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화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시한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하기 전에 보니까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이런 건 이미 타결다 해 줬습니다. 협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협상이 시한을 정해 놓고 하라 그러면 시한 정해 놓은 측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스크린 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거 왜 이렇게 일찍 타결했습니까?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타결해도 되는데…… 이 협상 누가 주도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선 시한을 정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양국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하나하나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를 않고 전체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좀 신속 일종의 비준동의라 할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양국이 그러한 일정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의 일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런 국회의 원활한 동의를 얻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는 한 나라의 사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일정을 가능한 한 감안해 가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의 결과가 좀더 쉽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양국 간의 국익이 현저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 불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타결하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일정한 시한은 가지되 그 시한 내에서 양국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오랜 동안의 현안입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재개 문제도 광우병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제기구들이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개 문제는 논의를 했고 이것은 통상의 협상보다는 일종의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이고요, 스크린 쿼터도 벌써 7~8년 정도 한미 간의 통상의 현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FTA라는 좀더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그러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오랜 동안의 한미 간의 현안은 가능한 한 해결을 하는 것이 서로간의 통상 협상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협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총리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주고 얻은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 문제는 양국 간 통상의 오랜 동안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오을 의원 아니, 아무리 통상의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를 눈앞에 두고 이것 주고 얻은 게 있느냐고요. 뭘 얻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것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권오을 의원 왜 하나하나의 해결을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한미 FTA 하면서 이것 다 거론이 될 텐데……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쇠고기 수입 같은 것은 지금 식품 안전 때문에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권오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리대행께서, 그리고 우리 통상팀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미국인들한테 고분고분하게 해 가지고 서로 편하게 쉽게 넘어가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한테 줄 선물 보따리가 없으니까 스크린 쿼터도 미국산 쇠고기도 자동차 배기가스도 왕창 주자, 그래서 국가이익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손님 접대 한번 시원하게 잘해 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오을 의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쇠고기 수입은 이미 11년 동안을 협의를 하던 내용입니다.

○권오을 의원 미국에서 광우병 또 발병됐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니까요.

○권오을 의원 그러면 스톱시켜야지요. 금지시

켜야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래서 현재 수입이 일단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발생한 광우병이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 판단하는 시기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을 의원 며칠 전 국책연구소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그것은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국의 관세를 다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데 어떻게 해서 상호간의 교역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을 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한·칠레 FTA도 2년 걸렸습니다.

정말 서둘러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가부채를 동결시켜 주든지 소득농정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선대책 후협상 하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런 협상과 보완대책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같이 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기한 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류슈칸 박물관 방문하고 싶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한번은 대일 강경 외교를 주문했다가 한번은 류슈칸 박물관 가고 싶다, 전략적 유연성 안 된다고 했다가 장관회담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고…… 누구 말에 장단을 쳐야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아까 외교부 차관께서 그 배경과 의도를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FTA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2003년부터 장기적인 FTA 로드맵에 이러한 미국에 대한 협상을 궁극적으로 FTA의 주요한 하나의 현안으로서 추진을 하자는 내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권오을 의원 앞으로 더 이상 대통령께서 일관성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른 말씀으로 인해서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진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통령께도 분명하게 앞으로 외교·국방·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신중하게 결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한미 간의 문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의 현안들이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대사관 청사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오랜 동안의 판단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참여정부 초창기부터 깊숙이 관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론적 토대도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제가 과문해서 묻겠습니다.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좌파정부다, 좌파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앞뒤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정확히 다 헤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파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배지향적 사고는 또 좌파적인 쪽에,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그런 쪽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건 우건 현재의 우리 경제를 적절하게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분배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쪽 정책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현실에서 지금 전 세계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념에 따라서 나온 그러한 정책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실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분배를 위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을 다 혼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을 의원 선거에 표 모으기는 좌파가 더 유리할 것 같고 실제로 국가의 경영을 해 보니까 우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좌회전 깜빡이 켜면서 우회전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해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도 직접 모시고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와 같은 예민한 분야에서도 실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신다는 생각도 안 하셨고 또 이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그렇게 자꾸…… 국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을 의원 왜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좌파 괜찮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좌파 정책 할 수 있고 우파 정책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경직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저는 탈피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선거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2 대 8…… 2 대 8 양극화가 아니라 중산층을 빈곤화시킨 정권이 현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좌파·신자유주의,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것은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시겠다는 의지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념에 기초한 정권이 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오을 의원 다음에 우리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된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좌파·신자유주의 하니까 '혹시 좌파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외교 정책은, 통상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하고, 가닥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된 한반도는 정치·군사적으로는 중립화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교는 미·일·중·소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중립화 사례에서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통일헌법준비단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통일부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당연히 기본 전제로 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민정부 때부터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통일 문제는 화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화해 협력의 결과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밟게 되고 그리고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미 저희가 거의 90년대 초부터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봤을 때 우리 참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는 정책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화 통일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반도의 통일 전략과 관련해서, 이미 이론 진영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정부 차

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법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권오을 의원 91년도에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왜 국회에 비준 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 당시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야당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여권에서 '비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당시 비준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가 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비준안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을 의원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남북기본합의서는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 단계에서 정말 남북연합 정도로 갈 정도로 아주 심화되는 모든,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또 경제 협력이 되는 이 모든 것을 규정해 놓은 장전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본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유엔사무국을 통해 등록하게 되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시기의 적절성 따지지 마시고 비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기 모든 기본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 91년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몰라도 내용이 옳다면 현 정부에서는 분명히 비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관계, 현 정부에서 실제로 신경 쓰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시는 여러 가지,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하거나 또는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원 이런 사항을 정부에 부탁을 하셨고 또 정부도 흔쾌하게 대통령이 방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정부 특사 자격입니까, 민간 자격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 내신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의 원로로서 민간인 자격으로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인권 대통령으로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인권 특사 자격으로 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시고 시정을 촉구해야 된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가지고 방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김 전 대통령님께 '어떤 의제를 갖고 방문하십시오'라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오을 의원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오을 의원 남북의 여러 가지 동질화 사업을 위해서 방송을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우리도 개방하고, 우리의 방송도 북한이 받든 안 받든 대폭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남북한 방송사 간의 방송 교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권오을 의원 이래저래 따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어차피 체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우위라는 판단이 선다면 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군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춰서 남북이 군축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적정한 군사력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6·25 전쟁의 쓰라린 경험, 소위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 또 정전체제,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도가 넘는 그런 군사력을 남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미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력을 발전·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국방개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남북 관계를 선도해서 어떠한 위협 정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양쪽이 유지하고자 하는 군사력 수준을 좀더 경제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교·국방·안보 정책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권오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3일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즈 워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의 방문기간 동안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자성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작년도 국제결혼율이 13.6%, 그리고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가까이에 육박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다민족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신문을 메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 여러 인종이 함께 삽니다. 우리 한국인은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을 유지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 왔고, 우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도 단일민족과 한겨레에 대해서 자긍심을 키워 주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눈에 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경기의 응원에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바로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민족의 신화가 이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화면에 곧 나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 사례가 지난해만 4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해마다 거의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에서는 결혼 3쌍 중 1쌍꼴로 국제결혼은 이제 아주 흔한 일이며, 전북 무주의 한 산골 초등학교에는 내년 신입생 예정자 8명 중 반이 혼혈아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더니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시집 온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언어 장벽, 사회적 부적응, 한국인 남편의 폭력, ‘코시안’ 아이들에 대한 왕따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또는 차별받는 혼혈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총리께서 좀 말씀해 주

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혼혈인 문제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혈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대상 다문화 교육 강화, 교육·의료 등 혼혈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혼혈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성곤 의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김성곤 의원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보다 우리 국민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엔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지금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타민족,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 순혈주의를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배타적인 순혈주의가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혈주의가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혼혈인에 대한 차별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급속도로 인구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혼혈인 역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외세의 침입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지정학적인 원인, 또 국제화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짧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성곤 의원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우리 국민과 결혼하거나 귀화하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도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는 평등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의원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여기에다가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인종에 의한 차별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우리 한민족을 우선시하고 타민족을 배려하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또 헌법 제9조에 '국가는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족이란 우리 한민족을 칭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소극적 해석으로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문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우리의 문화, 즉 한민족 문화로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를 포용하고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개방적 한민족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출신 국가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면 우리 헌법의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외국인들도 다 포함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일단 한민족의 민족문화는 배타적인 한민족 문화가 아니고 소수 민족문화를 포용해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개방적 한민족 문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의 길잡이에 보면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이다' 또 6학년 도덕책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외

국에 사는 동포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과서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한민족만 살고 있지 다른 민족은 살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느낍니다. 다른 민족이 엄연히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법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다른 소수 민족을 사실상 또 암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민족 사회가 된다면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9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라는 전문은 '인류애로서 한민족과 소수민족과의 화합을 도모한다' 이렇게 바꾸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는 한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소수 민족의 문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수 민족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국정교과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2학년 2학기 책 내용을 앞으로는 '피부색은 달라도 세계 모든 인류는 한가족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세계화 교육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교과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파키스탄의 노동자건 필리핀 신부건 또 한국인과 이들 사이에서 난 혼혈인이건 사실 모든 인류는 다 한 핏줄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가 다르다면 다른 민족 간에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 색깔에 너무 민감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과 교류 과정에서 몽골인, 중국인, 일본인들과의 피도 섞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세계화되면 될수록 다민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회에 필리핀계 혹은 베트남계 한국인이 들어올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민족은 대한민국에서 다수 민족은 될지언정 유일한 민족은 아니며,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던 종래 우리의 법, 교육 그리고 국민의식은 이제 크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민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분이 통일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일의 당위성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참 대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분열되었던 단일민족공동체의 복원, 어떻게 보면 선천적 형질과 같은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권 붕괴 속에서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또 유고슬라비아도 무너졌습니다마는 이런 연방국가들의 해체 과정은 민족국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선진 국가들 속에서도 민족 단위의 문제들로 인해서 분규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선천적 형질로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분단이 우리에게 준 지난 60년간의 부정적 피해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크게 본다면 지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 규모로 우리 한반도가 정말 동북아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공동체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부분이 통일의 당위성으로서 상당히 큰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난 연말 통과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민족 동질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또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 올리면, 지금 남북한 간에는 정치생활 분야가 가장 동질성이 떨어져 있고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생각보다도, 역시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지만 관계없이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문화적 연대성이랄까 공통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생활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시장경제 쪽으로 속도를 점점점 빨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경제생활 쪽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할 만한 것은 실제로는 남북한 간의 체격적 차이에서 이질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탈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신체등위상 키는 한 15~20㎝ 남한과 차이가 나고, 몸무게는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통일시대를 맞이했을 때도 아마 하나의 민족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로 공존하고, 또 나아가서 유사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길들을 중장기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사회·문화·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교류 협력과 경제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유사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또 북한 역시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시장경제로의 진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대북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 북한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는 우려, 위험성들을 우리가 막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키가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마십시오.

민족 동질성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민족의 생일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김성곤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하고 있고 북한도 93년부터 단군릉을 발굴해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개천절을 같이 경축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들이 만약에 남북 간에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로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한은 국제화되면서 자꾸 다민족 사회화되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민족의 주체성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민족관에 관한 이 차이가 혹시 앞으로 남북통일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80년대 이전에 북한의 민족관은 저희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족관이라는 것이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민족이고, 사회주의적인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아예 민족을 달리 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80년 이후에 완전히 그러한 민족 개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핏줄과 언어가 민족 공동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민족의 기본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민족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이고, 굉장히 혈연지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완결성, 자결성을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민족주의가 강한데 우리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 형태로 국제협력과 민족주의를 병행하고자,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주로 안으로 자기 중심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안과 밖을 같이 조화시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남북한의 민족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반기문 장관께서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시는데 유엔사무총장 만들기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김성곤 의원 우리 한민족을 문제를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재외동포 문제입니다. 지금 해외에 얼마나 많은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현재 외교부 추산으로는 약 663만 명으로 추계되어 있고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에 이어서 제3위의 많은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에는 영주권자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의원 또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재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고로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동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의원 현재까지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가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도 현지민들과 결혼하면서 2대, 3대로 내려갈수록 우리 한민족의 혈통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 혹은 본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이 혈통주의적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지금 혈통주의만 가지고는 그것이 변화하는 세계 정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국적주의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출생주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재외동포……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속지주의적인 요소도 감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는 중요한 다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땅에서는 한민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민족이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해도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내에서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이 다수이고 강자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 한민족은 아주 소수민족이고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노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거주국 문화에 융화되어서 사라져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처절할 정도로 주류 민족의 차별을 받아 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든 또 외국인과 결혼해서 살든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보존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글,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 한복 또 한국의 음악과 미술 그리고 한국의 사상 등은 우수한 것이 많아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보존해야 될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외국에 많이 전해질수록 우리 한국문화와 또 한류가 고양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력의 신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민족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넓혀서 정의할 것을 장관님께 제의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필리핀 며느리도 또 미국에 사는 미국인 사위도 우리 한문화를 익히면 다 한민족입니다. 저는 이것을 문화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으며 문화민족주의는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타 민족에게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민족주의를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대안으로 외교부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피부색이 한국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이해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지금 김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민족주의 개념은 재미난 개념이고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그것을 어떻게 법규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할지 그 문제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장관님, 재미난 제안이 아니라 심각한 제안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쥬이시 커뮤니티 센터(Jewish Community Center)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Korean Cultural Center, 한문화센터를 여기저기 지어서 우리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하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개방해서 한류 확산의 근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외교부에서도 6개 공관, 11개 지역에 11억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런 Korean Cultural Center랄까 한국문화센터를 계속 증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개를 10년에 나누어 세우면 매년 50억도 안 들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민족적 정체성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날이 10월 3일 개천절하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의 일주일을 한민족문화 주간으로 선포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동포들 그리고 남북한 우리 한국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함께 하는 세계문화축제 주간으로 삼을 것을 장관께 제의하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장관께서 나오신 김에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240억 정도입니다. 그나마 자체 예산이 없고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그 기금을 일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김성곤 의원 이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할 항구적 재원을 만들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글쎄, 외교부에서도 정부예산 증액과 더불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한번 기획예산처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외동포들의 요구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국내 선거에서의 선거권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OECD 선진국들은 재외동포들, 영주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 문제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지금 주고 있고,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영국 같은 데를 보니까 이주한지 한 10년 된 사람한테는 국내 선거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 귀화해서 살아라 이런 절충적인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의원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구조에 큰 위기를 맞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한테 영주권 주는 문제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일부 이민을 허용할 생각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런 것도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한테 정서적으로도 배타적이지만 국제원조에서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의 경제규모가 교역량으로 세계 11위 수준인데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ODA, 공공개발원조의 규모는 2004년도 4억 2000만 불, 국민총소득 대비 0.0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빨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후에 어려울 때 선진국들로부터 협조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이 ODA 증액 문제, 또 개발도상국가 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사실 작년에 이미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 정부 재정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까지 우리도 ODA 수준을 GNI 대비 0.1%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0.1%가 되더라도 우리 OECD 평균인 0.25%에는 아직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2015년까지 GNI 대비 0.7%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ODA를 늘려 간다는 원칙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성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단상이 빙빙 돌다 보니까 저도 어지럽네요.

(웃음)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하에서 36년간 나라 없이 살았고 해방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애국애족에 호소하며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논리로 유달리 우리 한민족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도 세계 11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또 우리 한민족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우리 국가와 민족에서부터 전체 인류로 넓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에만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는 인류 평등의 개념을 우리가 생활화할 때 우리의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은 보다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 문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귀중한 유산을 유지·발전시키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한민족주의와 다민족사회, 그리고 동포애와 인류애를 보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여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진정한 뜻이며, 우리 한민족의 이름 '한', 이 '한'에는 크다, 밝다,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한'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다음부터 '잘 했어!' 그러지 마시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웃음)

○부의장 김덕규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여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투기 행위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미숙한 판단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먹구름만 보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에서 내놓은 한반도 정세 보고서는 현재 한일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순간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충정을 헤아리셔서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이념적 편향 문제 등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의 태도에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스스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만 생각한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의지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요덕스토리'를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의원 '웰컴 투 동막골'은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못 보았습니다.

○유기준 의원 '태풍'도 못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못 보았습니다.

○유기준 의원 통일부장관, 또 이전의 NSC 상임위원장에서, 그 자리가 아주 힘든 자리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문화생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친북 단체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선 '요덕스토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만행을 극화시켜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관객들의 성원으로 앙콜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관계자는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서 "실상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극화돼 있어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수십 년간 그 업무를 담당했던 저희 담당관의 판단으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 말에 동의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 담당관이 한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요덕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북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만행들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는 북한을 오랫 동안 연구하신 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춰진 수용소'……

○통일부장관 이종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기준 의원 2003년 발간된 데이비드 호크가 쓴 '감춰진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책의 번역본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감춰진 수용소'를 펴 냈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고 독재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엽기적인 만행들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내용만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북한 전역에는 현재 수용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6개의 관리소와 8개의 교화소 해서 14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10~12개의 교화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고, 수감자 수는 통틀어서 최하 2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

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숫자는 저희가 추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수용소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국가보위부 관리 윤대일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많은 탈북자 분들이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지득했고 정부 역시 또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요덕스토리'가 정말 픽션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면 요덕관리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관리소 번호가 15호입니다. 15호 요덕관리소는 함경남도에 있고 총 10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4, 요덕관리소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서 있는데 그중에 구읍리 지역에는 구류장—사람을 먼저 데려오는 장소—또 탈곡장, 보위부 건물, 석회석 광산, 이렇게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5, 이 화면을 보면 수용자들이 공개 처형을 하는 장소라고 증언하는 곳이 번호 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개처형의 방법은 보통 총살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돌팔매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렇게 증언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화면 6, 여기 보면 화면 6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옵니다마는, 시체 매장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처형된 시체들을 그곳에다 갖다 묻고, 또 이에 대해서는, 시체에 대해서 어떤 경의감을 표하는 것은 아예 없고 바로 거기 가서 침을 뱉고, 또 돌팔매질을 더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덕수용소를 탈출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항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사항들의 사실 여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상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화면 7, 여기는, 요덕관리소는 다른 곳과는 달리 식량을 생산하는 장소인데 여기도 또 광산이 있습니다. 점토광산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화면 8, 화면 8은 보면 좀 특이하게 여기 양귀비 재배장이 있습니다. 이 양귀비는 아편을 만드는 그런 원료인데,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위폐를 제작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양귀비 재배를 통해 가지고 아마 마약도 수출한다, 이런 사실까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기준 의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오늘 이게 확인이 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런 증언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고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한 수용소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 책에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없고 한 두세 명 정도를 제가 소개하고 그 증언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강철환—요덕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사람인데—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탈출을 시도했거나 음식을 훔치다 붙잡힌 수감자가 총살형으로 때로는 더 처참하게 공개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몇몇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옮겨지기 전에 다른 곳에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살을 생각도 한다, 자살도 한다", 그다음에 "요덕에서 있었던 10년 동안 2000～3000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영양실조와 질병, 또 탈수에 이르는 심한 설사로 매년 1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들이 그런 여러 정보

나 첩보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다음, 이 두 분은 다른 곳에 있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인데 여성 탈출자들입니다. 최영화, 그리고 여기 지금 익명인데, 또 한 사람은. “지금 북한포로수용소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면 바로 죽인다”, 이런 말들은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모가—구금된 임산부가—아이를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만유도 주사를 놓고 아이를 낳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로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모가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담당자들은 산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젖은 수건으로 질식시켜 죽였다”, 그다음에 “몇몇 임산부들이 끌려 나가서 낙태시키기 위한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집결소로 와서 아이 4명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바구니에 담겨서 비닐에 싸인 채 근처의 창고에서 죽을 때까지 방치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같은 민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북한의 수용소 실태’라는 책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강철환 씨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 사이에 요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이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회사평론 편집장이라고 하는 피에르 리굴로라는 사람은 북한의 이런 강제수용소 현실에 대해서 “이전의 스탈린 수용소보다 더 못하다. 왜냐하면 스탈린 수용소에는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만 갖다가 가두었는데 여기는—북한은—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같이 가둬 가지고 모두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또 교화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가 이전의 스탈린 수용소보다 훨씬 더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이미 이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은 다 이제 공인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정보의 차이가 일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유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만든 바 있지요? 그다음에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은 벌써 세 번째로, 이번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한 인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과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육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자, 그러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정부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관계없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 뭐냐 했을 때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개방경제로 발전을 시키면 인권이 동반으로 신장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 같은 분도 작년에 교토에 와서 연설하시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권 신장을 도모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기준 의원 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옛날에는 인권에 대해서 관심 못 가졌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인권을……

○유기준 의원 자, 그러면……

○통일부장관 이종석 가져 왔습니다.

○유기준 의원 경제가 발전하면……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권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개방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그 사회에, 그들 스스로가 인권에 눈뜨고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저는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인권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예측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경제가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의 이론대로 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은 굉장히 요원한 그런 현실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인권 개선이 요원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기준 의원 아니, 방금 장관의 이론대로 한다면 경제가 발전해야지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건데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미국은 50년 동안 쿠바를 봉쇄했지만 쿠바의 인권이, 거기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유기준 의원 쿠바하고 북한은 또 다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기준 의원 자, 다른 쪽으로 갑시다.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과 위조지폐, 마약 밀매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소련—에 대해서 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는데 1975년에 잭슨-배닉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장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과문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잭슨-배닉법은 어떤 거냐 하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미·소 무역협정을 철폐하고 시베리아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유태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결국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북한의 아주 큰 후원자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이 바로 스쿠프 잭슨 법안인데 그 내용은 지금 화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11.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이 탈북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송환을 계속하는 경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또 유엔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먼저 2003년 수준으로 줄이고, 또 이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997년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 그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을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12, 여기 보면 작년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2400억 달러입니다. 2003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1500억 달러입니다. 90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었지요. 1997년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62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003년 수준으로 줄면 중국의 수출액수가 2005년 기준으로 900억 달러가 줄어야 되고, 또 97년 수준으로 준다면 4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의 수출 액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빵이냐, 아니면 배고픈 친구냐를 선택할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직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욱이 어느 국가도 자기 경제적인 전략을 놓고 큰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과를 다 알지 못하지만 좀더 사태 추이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기준 의원 사태 추이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앞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입법 방향으로 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켜보시고, 그런 일이 현실화될 때가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그러면 중국이 빵을 선택해 가지고 오랫 동안의 우방인 북한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미 가정에 기초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기준 의원 가정이라는 것이 미구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통일부장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막연한 어떤 가상현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못 하고 통일부장관으로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 방법과는 다른 방법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대한 정세 변화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미·중 간의 거대한 정세 변화와 그다음에 외교적 변화를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대처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유기준 의원 오늘 연구가 안 되신 모양인데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요구한 북한 인권 해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적 개선 요구는 북한이 이를 체제 변동 요구로 받아들여 반발을 초래하고 그동안 애써 온 수많은 노력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권 개선 요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이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전에도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 지금 우리 통일부의 외교정책, 북한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정책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 정권만을 위한, 특히 김정일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통일정책입니다. 이런 통일정책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장관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어떤 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또 북한을 미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함께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김정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기준 의원 지금 북한 주민들 2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가지고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재판 절차 없이 구금되면서 처형당하는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판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유기준 의원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장관입니다.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하의 공개 서한을 대통

령에게 보내서 드레퓌스의 간첩 누명을 벗긴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심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을 이유로 영국에 망명하게 된 에밀 졸라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이들에 대항하였고,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드레퓌스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가 밝혀지도록 한 에밀 졸라의 용기와 노력이 새삼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열악하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GDP 세계 11위의 경제 성적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정보통신 기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대중문화 브랜드 '한류', 잇따라 주목받는 스포츠 외교, 단기간에 급성장한 민주주의 창달 등 가슴 뿌듯한 현실 앞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인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입니다.

동맹이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국가적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마련이고, 도대체 나라 사이의 국가 이익이 완전히 합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두 나라 국내 여건과 국제 환경 양쪽으로부터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변화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한미동맹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화, 남북관계의 진전 등의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안보정책의 변화, 동북아 주변 안보환경의 변동 등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이러한 상당히 빠른 안보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공동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한미동맹은 과거 군사·안보 협력 위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2005년 5월에 더글러스 페이스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군사 대비 태세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년 초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 4년 주기로 나오고 있는 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급변 사태를 우선 상정한 군사전략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고정자산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따라 활용되는 유동자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 유동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리나라는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주한미군을 적극 활용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지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유사시에 미군 전력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혈맹의 시대는 이제 가고 신용동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 가치를 위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미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포괄적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동맹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성숙된 한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에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저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재팬 타임스'에도 사진이 아주 크게 실렸더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난 3월에 있었던 연합훈련 저지 시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는 매우 중요한 연습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저지되거나 시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격한 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평화시위정착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단체의 시위 참가 방지와 불법 폭력 시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다음은 한미동맹에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지니는 의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맹의 조정에 있어서는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불협화음도 생기게 마련이고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과 해결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군사변환정책 추진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은 핵심입니다. 자국의 군사력을 지리적·상황적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군사변환정책 그리고 그 핵심인 전략적 유연성 개념, 이것이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탈냉전 이후에 증가하는 불확실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상호 이해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 측이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명자 의원 예,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지난 2월에 합의한 것, 이것은 동맹의 의사소통 구조가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합의 내용의 골자, 의미,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난 1월 19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은 미 측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합의는 한미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양국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현실적 필요성을 존중한 기초 위에서 이룩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정신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자 의원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영국의 외교관 헤럴드 니콜슨 경이 "외교정책이 비밀에 부쳐져서는 안 되지만 협상 내용은 반드시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협상의 특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긴요한 협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밀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비밀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환경이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이익에 긴요한 기밀이나 핵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나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1급부터 3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상 내용에 대한 관리에도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국무총리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개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군사 변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해서 혁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개혁 2020'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법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하자면,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맞도록 우리 군대의 구성과 교육 훈련을 포함한 조직을 대폭 현대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군과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소위 문민통제의 원칙에 의해서 전문성을 양자 간에 보장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 관리를 위해서 군수 지원이라든지 교육 훈련을 아웃소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대에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병영문화를 소위 민주화·현대화 하는 그런 것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지난 정부들에서 여러 번 시도는 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인 만큼 이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의 법제화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1980년 중반을 거치면서 국방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말부터 약 17, 8년 동안 국방개혁을 계속 추구했지만 기본법이 없으니까 단일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너무나 시간도 급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러한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나가도록 기본법을 정해 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명자 의원 미래전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슬림화하고, 그리고 또 기술혁신에 부응해서 기술국방 구현을 한다, 목표는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그러니까 양적 축소, 질적 변환—두 수레바퀴가 하나의 축에 연결되어서 제대로 굴러가야 될 텐데 이 개혁안을 둘러싸고도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보불안론, 위협과장론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무엇이고 정부의 대응논리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쟁점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적정한 우리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최초 한 5~6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꼭 법제화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군의 전문가,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국방개혁기본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추진하는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연합방위체제, 또 협력적 자주국방, 이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하고 관련돼서 국방개혁기본법안과 협력적 자주국방이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지난 50년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관 또는 연합사령관에게 의탁해 놓고 지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우리 국력이라든지

대북의 잠재적인 대항력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치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 위에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존속해 가면서 한반도의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인계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한미 정부 간에 긴밀히 협의된 사안도 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받아 오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술국방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투자비 투입을 보면 미래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4ISR, 또 공중방공전력 확충, 이런 것보다 그냥 기존의 재래식 기동타격 이쪽에 치중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 보면……

그런데 그 개선 내용,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설명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을 줄이고 질을 개선한다, 질로써 양을 대신하는 그런 과학문명의 장점을 빨리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병사를 줄인다니까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시대에는 질이 양을 능가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사력을 발전시킵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전제조건, 소위 조기경보능력이라든지 C4I—지휘·통제·통신 능력—이런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같이 작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군은 미군의 이런 것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겠구나 하는 일말의 염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일차적인 군사적 위협의 상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경제성 문제하고 크게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의 개념은 무작정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능한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국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국방의 정도도 한미연합사에서 배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자 의원 저는 지난해 국방부가 거둔 성과 가운데 큰 것이 병영문화 개선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난 한 2, 3년 동안 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군과 사회가 단절된 속에서 군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 문제라든지 장병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사회와 군대, 군대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병영생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올리는 문제, 또는 업무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사들이나 병사를 군에 보낸 가족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약 60% 이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통계를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과 사회의 단절을 허물고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저희 군대도 서구의 군대처럼 삶의 질 문제, 인권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자 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 군대 말씀하셨는데 선진 정예군 만들려면 군 복지제도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미국처럼 세부적 지원을 명시한 법령 정비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군 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정도는 검토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그보다 앞선 것이 장병복무기본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금년 내로 제

정할 예정이고, 이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병들의 복지기본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일반 사회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군대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비단 장병뿐만 아니라 군 가족 그리고 제대군인 모두 포함해 가지고 보다 복지가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 정예군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시각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군사주권으로 해석해서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견해가 있고 자체 방위력의 한계, 한미동맹 등을 이유로 해서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견해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통권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1990년 초부터 여러 정부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 정부가 한미 간에 좀더 명확하게 문서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환수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 측에 넘어온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보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이제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만 보완이 되면 되기 때문에 수년간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환수받겠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김명자 의원 이렇게 전시작통권 한마디를 갖고 설득을 하시려면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작통권이 무엇을 의미해서, 환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달라지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환수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쯤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국력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합니다. 전시작통권을 환수받는다고 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시작통권이 이전됨으로써 한미연합사가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위기라든지 전쟁 시에—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연합방위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금년 가을까지 한미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방력이 현대화되었고,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위기관리는 한미가 연합방위 체제로서, 연합사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합의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김명자 의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하는 점으로서 예를 들면 전쟁 억제능력, 한미동맹 이익, 자체 방위 역량 확보……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격이 여건 조성 시에 이양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논의의 마무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 문제는 90년 중반부터 언제쯤 우리가 전시작통권을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면 우리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받아 와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한 상황 설정을 해서 어떤 목표 연도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몇 년도에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검증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해를 목표 연도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초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당장 받아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명자 의원 염려하는 의견에 귀 기울여서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김명자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입니다.

작년 11월에 방한한 문타폰(Munthabhor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남북 관계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대북 식량 지원,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자 의원 여기에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딱한 사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다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함축적 우리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기본권 가운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제1차 사업을 삼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이라고 갖기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김명자 의원님 질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인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아마 국민의 정부때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1980년대 후반에 가서 NGO들에 의해서 실상이 조금씩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90년대 중반부터 UN 기구 등을 통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1996년에 외교부 장관이 UN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즉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정부 당국자의 언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명자 의원 그러면 조용하지 않은 외교…… 지금은 조용한 외교를 하고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조용한 접근에 대해서 국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그런 일관된 정책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대두되는 미묘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조용하지 않은 외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과가 어땠느냐 하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해서 인권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발로 인해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결국 햇볕정책 기조와 아울러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참여정부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 올리면 남북한 간에 대결 일변도로 으로 들어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나갈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95년 그 당시 상황은 남북한이 아주 척질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문민정부 쪽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랬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다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논의가 아주 분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해 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국가보안법을, 국제사회에서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더랬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폐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논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권은 침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맞는 해석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자 의원 여하튼 우리 내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침묵했던 쪽에서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침해, 우리의 경우 정도의 차

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인권 문제를 이중 잣대로 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칫하면 정쟁도구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대결 상태에서 화해·협력 관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결의안 참여 같은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문타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저희 입장을 얘기하면 그런 것이 미국 조야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똑같은 기조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수차례 말씀 올리는데, 똑같은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들이…… 참여정부는 그동안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이 보다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데 다 힘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본 의원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용한 접근으로 일관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21세기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 인권. 그다음에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 지구적 가치 추구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비쳐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과업에 세계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법상 의무사항은 북한도 지키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유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작년 12월에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국제사회의 인권협력, 인권대화를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국제사회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본인에게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스스로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통일부장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외교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약소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거버넌스의 해석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평화 등 보편적 가치 추구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엔 PKO 참여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참여 수준이 낮습니다. 전체 7만 3000명이 지금 PKO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 규모 세계 제6위인데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저도 김명자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개 파병요청 후 1개월 이내에 초기 대응을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PKO 파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PKO 파병은 다국적군 파병과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분이 되어야 하고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자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김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안보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안보 태세를 흔들고 평화 무드만 부추기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북한 핵,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고 개수가 문제이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북핵을 풀기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6자회담은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해결의 돌파구도 못 찾고 북한에게 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원수가 원수(怨讐)라며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방조하고, 한미 연합훈련 방해 시위를 뿌리뽑지 못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하겠다고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고, 국방개혁이라며 일방적으로 군을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은 불안하고 한미동맹은 상처투성이고 국방 태세는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방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안보를 지키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다 보니 북한 인권은 풀리지 않고 북한 주민의 고통은 해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대행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동떨어져 있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핵문제는 풀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풀 의지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등 주요 당사국 간 이견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경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협력대화 계기에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양자 및 다자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서도 북한이 불법행위 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지 말고 조속히 차기 회담에 응해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황진하 의원 한미훈련 방해 책동을 뿌리 뽑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가 반미 전쟁터가 되어 버린 평택벌판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한미 연합훈련이나 평택기지이전사업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격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상당히 미온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그동안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순수한 농민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따뜻함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과격 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이런 관련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합동대책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번에도 국방부장

관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번에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국민담화문 발표 방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래서 국방부장관 혼자서 이것을 다 막아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 장관께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그래도 이러한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지금도 북한에서는 고문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굶어죽고 정치수용소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했던 사람이 탈남을 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인권의 주소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통일부장관께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인권실 태 조사를 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유를 다는 것이 현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을 따지는 것이 안정적 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통일부장관께서 좀더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남북 간이 아주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차피 남북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전반적인 동북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더 과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지금 정부가 그런 태도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북한은 ‘아, 남한의 속셈이 이렇구나’ 이것을 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치 학살 유대인을 추모하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물들은 나치의 엄청난 인권유린과 탄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참상 실태를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의 현실에서 정부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홀로코스트와 같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우리가 안정적 관리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조용조용하게 지나간다, 이 속셈을 꿰뚫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받고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할 때 북한은 오히려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동안에 북한 주민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받고 있다가 해결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를 우리도 나서서 지적하는 것만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화해와 협력의 이러한 관계가 좀더 진전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하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한 급변 사태가 오지 않도록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 코스트도 줄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 사태가 안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태가 전혀 없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현재로서는 저희가 남북한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하고 특히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러한 급변 사태는 가까운 시일에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유엔 깃발을 내리는 것과 같은 조치라 생각을 합니다.

급변 사태가 왔을 경우, '안 오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오면 좋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유엔 깃발이 제휴가 된 가운데 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대한민국 깃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독립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주적 군사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를 단시간에 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께서 좀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주변 국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유엔 깃발을 내리려는 시도를 하거나 전쟁 억제 차원에서도 유엔 깃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국민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진전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반응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로드맵은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와 준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안보활동비를 삭감한 적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게 맞는 조치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국회에서 보훈기금을 심의하실 때 재향군인회의 기본 설립 취지에 맞춰서 회원의 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재향군인회가 활용하던 안보활동비 항목을 생계 곤란한 회원의 생계비, 자녀 장학금 등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이분들이 안보활동비를 사용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 주장하고 나올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갔고 쓸데없이 아무 데나 낭비한 돈이 아닙니다.

1억 원 정도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병들 입장에서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많은 돈이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해 놓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나 그러한 돈을 생계 곤란한 회원의 생계비와 자녀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좀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노병들이 우국충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가지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쓰는 것을 삭감을 하고 또 다른 명목으로 돌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정부가 각성하고도 모자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문제를 새롭게 정리한다 해서 과거사 문제가 매우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숨겨진 사람, 6·25 때 희생됐던 사람 중에서 숨겨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찾아서 정말 정상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긍정적으로 기여한 모든 분들을 찾아서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마스터플랜도 없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참전용사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러한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총리 산하에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6·25전쟁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공로와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구의 설치 문제라든지 또 국방부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검토 중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좀 더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확실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침에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이 북한의 정치수용소, 교화소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약 20여 만의 북한 동포 고생 상황을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여기저기에 있는 정치수용소를 한번 방문하자 이런 제안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북 지원을 하면서 대북 지원을 어떤 특정한 사안과 연계하거나 조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85년에 처음 고향방문단이 나온 다음에 15년 만인 2000년에 처음 이산가족 상봉이 됐고 지금 열세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이만큼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어떤 사안과 어떻게 나름대로 고리를 걸건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걸지는 못하지만 크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하던 금강산에서 우리 기자가 '납북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 썼다가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기자 취재활동도 방해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은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제대로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과정에 납북자 문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지 않고 그냥 납북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겨우 끌고 나와서 납북자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이 장관께서 애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애들이 달래고 달래고,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요, 뭐……

○황진하 의원 만날 오냐 오냐 그렇게 합니까? 또 줄게 또 줄게 그럽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말씀하시는 것이 북한을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하 의원 뭐가 적절치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애가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하 의원 북한에 대해서 계속 설득한다, 설득한다, 설득한다 그러다가 정치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신음하다 죽어가고 있고 임산부는 낙태를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득한다고 세월 다 보내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설득한다고 해서 무슨 말로만 설득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애에 따라서 제가 달리 다룰 수밖에 없는데 북한을 다루는 데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황진하 의원 이 장관의 애는 그래도 착한 애인 모양인데요, 북한을 지금 착한 애로만 생각해서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애가 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황진하 의원 어제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납북자하고 국군포로를 송환시키기 위해서 SOC 투자할 용의가 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에 이르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또 그것은 국민께서 납득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라고 딱히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황진하 의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제 나왔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납북자 문제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문제입니다. 그 50년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황진하 의원 아니, SOC 투자하는 것이 이야기가 왜 이제 나왔어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참여정부가 한 3년간 연구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SOC는 저희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황진하 의원 남북 간에 송환 원칙도 확실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뭐고 하는 것을 국민한테 분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요덕스토리'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황진하 의원 이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과 인권 탄압 상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였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모르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정부 여당에 있는 인사들도 많이 가 보라고 권장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요, 지금 의원님 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 정도 제기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납북자, 북한 인권 문제나 요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황진하 의원 거기 가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만 가고, 정부 여당 인사는 안 온다, 진짜 간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요덕스토리 뮤지컬 같은 것을 볼 용의가 없다 이렇게 대변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니, 저희한테……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장하실 용의가 없나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특정한 공연물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혹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정부가 권유해도 문제가 되는 사회인데 저희 판단에는 저희 국민들께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더 알고 싶으시거나 또 필요하시면 가서 보시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그럴 일이다라고 판

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진하 의원 지금 해외 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공연을 권장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그런 것을 권장할, 제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검토나 판단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현재 말로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실태를 알려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진짜 말로만 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고려이지 생각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 사안 중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사안을 안 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말로만 인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하 의원 지금 요덕스토리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건건 전략적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설득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북한의 눈치보면서 못하는 걸 보고서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풀 용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는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미 오전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황진하 의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번, 만날 기권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럽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니, 기권한다고 해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정부 아니냐 이거야, 말로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는 말로만 정부가 아니지요.

○황진하 의원 행동을 한 게 어떤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말로만 정부는,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고 북한에 대해서 단 한 푼 지원도 안 하고 탈북자 1명도 안 받는 그런 정부 국가가 전 세계에 수십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말로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말은 자제하지만 행동을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 그걸로도 만족한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닙니다. 저희는 행동을 하고요. 앞으로 보다 더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서 말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때쯤 되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외교 안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은 통일부장관이 통일 잣대를 가지고 NSC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나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시고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NSC 상임위원장은 NSC 회의 사회를 보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지 제가 국방 일이라든가 외교 일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북 관계, 북한 핵 문제는 대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제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튼 통일부장관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NLL을 침범을 해도 이것은 통일 때문에 안 좋다, 외교 갈등이 생겨도 이것은 통일 때문에 안 좋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사회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니, 저희가 NLL을 침범했을 때 통일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 본 적 없고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

정되게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무슨 북한 눈치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안 계시고, 또 이산가족이 안 계시다면 왜 우리가 북한 눈치를 보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황진하 의원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북한 인권 북한 인권' 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는 북한 지도부가 어떤 인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북한 지도부의 인권을 옹호하겠습니까?

○황진하 의원 그런데 '북한 인권 인권' 하면서 지도부만 도와주는 식이 되지 정말 서민들—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는 정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걸 통일부장관이 아셔야 돼요. NSC에서도 회의를 주재하실 때 사회만 보시지 말고, 통일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장관 얘기하시오, 무슨 외교부장관 얘기하시오' 이렇게만 하고 사회만 보고 자기 개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건 통일부장관으로서 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황진하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그런데 말씀 올린 것처럼 통일부도 또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이 다른 부처들과 협의 속에서 조정이 되고 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진하 의원 통일부장관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어느 통일부장관이, 어느 어느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 역사 속에서 심판받는다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하시고 계신데 제가 쓴소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안보 안보' 그러면서 장관님 입장에서 했어야 될 일 중에서 참으로 안보태세를 흔들어대는 일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연합방위 태세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 태세의 기축이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아니,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기축—기본축—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기본축을 포함해서 도움이 되는 상호관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기본축이라는 것과 도움이 된다는 것과는 틀린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기본이 되면서 우리 군사작전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황진하 의원 저는 한미연합전비태세는 네 가지의 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편성과 지휘체계, 어떻게 지휘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작전계획입니다. 지금 짜져 있는 5027, 한미연합으로 같이 해서 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지원계획, 군수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시증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리발전과 훈련…… 이 네 가지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군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특히 동맹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로서 학문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하여 환수다' 이런 얘기는 지휘체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휘체계가 국적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런데 지휘체계를 흐트러 놓는 식이 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싸우고 미국은 미국대로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사를 보면, 존경하는 황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쟁터에 열 명의 장수가 작전을 지휘할 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교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예측해서 다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토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진하 의원 작전계획은 현재 5027로 짜져 있고, 작전예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발계획이 여러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근본적으로 전시작통권을

받아 오면 방위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약속한 대로 계속 한반도의 안보 공약을 위해서 있게 되면 그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 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협조체제, 협조회의, 상호지원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로드맵을 작성할 때 상호 긴밀히 토의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황진하 의원 지금 전쟁 지원 능력을 볼 때 우리 한국군 탄약만으로는 약 10여 일치밖에 탄약 비축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태세가 무너지게 되면 69만 명의 전시증원 능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군 숫자도 150만으로 줄이겠다, 우리의 동원 능력에 대해서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존경하는 황 의원님, 그 말씀은 이렇게 정확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의 탄약 지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지속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0일이라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앞으로 5년 이상 걸려서 환수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공약에 의거해서 한국군으로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전시 위기가 올 때는 당연히 증원군이 오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의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준비가 안 된 것을 말부터 해 가지고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병력 감축한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 대지 마시라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을 운용하는 나라는 상비군을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동원제도라든지 그러한 물자동원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위기 시에는 국력을 소위 전력화시키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작통권 문제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증원 문제는 이 문제의 로드맵에 서로 합의해서 시작할 즈음에 미 정부에서 증원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나갈 거니까 같이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로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필요하면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가서 문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분명히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그렇게 하세요.

○황진하 의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시간상 제가…… 받으셨지요, 차관님?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황진하 의원 이것은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예.

○황진하 의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에서 반미 책동이 계속 일어나고 훈련을 방해하는 책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잘 몰랐다. 그래서 제대로 못 했다'……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저 말씀입니까?

○황진하 의원 예.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평택보다도 만리포에서 있었던 한미연합전시훈련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또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수집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또 사후적으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현장에서 경찰과 군이 협조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시비하지 마시고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세 분 현장에 가 보십시오. 거기 가서 협조하셔서 대책 발표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필요할 때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4월 2일에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 사무실에 경찰이 난입해 가지고 서류를 압수해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예.

○황진하 의원 그것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우리 경찰들이……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사상 가장 공명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 직원들이 자기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정당법상 당원 명부조차도 조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예.

○황진하 의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그것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예.

○황진하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는 불안합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흔들어대고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흔들어대는 정부,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안보태세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단합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 북제주군갑 출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을 겪으면서도 제주도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제주는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월 3일 제주를 방문해 국가를 대표하여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하여 거듭 사과하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지난 4월 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 영령들의 한이 서린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가해자처럼 인식되어 오던 사람들이 참배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제주도민을, 그리고 유족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근혜 대표의 이번 참배는 냉전과 분단 체제의 수혜자로서 그동안 과거사 정리 작업에 미온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정치문화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폭압적 리더십이 아닌 상생과 조화의 리더십을,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까지도 감싸 안는 평화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과거 유신 독재정권과 군부독재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빨갱이로 조작되어 핍박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 중에는 야당의 지도부로, 유력한 광역단체장 후보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빨갱이었겠습니까?

사상 검증이라는 색깔론의 안경을 쓰면 3선의 관록을 가진 야당의 원내대표도, 유력한 광역단체장 후보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만 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사상 검증의 정치 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주 4·3 위령제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하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의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과거사 정리는 각종 역사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명예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정리하면서 다소의 부작용은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역사를 새롭게 바로 써야 분열과 대립의 사회구조와 문화가 시정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정의 확립,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그리고 희생자 심의·보상, 위령사업 등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사료관 건립 등등이 준비되고 있고 2년 후면 완공이 됩니다.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15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이 불비한 점이 있어서 운영할 주체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운영 주체로서 이른바 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법안심사 도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제주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심의하실 때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 또 국가재정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예, 됐습니다.

국무총리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 10월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에 마음의 빚이 있다”며 과거 불가피한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베트남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양국에 평화박물관 건립 등을 담당할 평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고 실천하는 한국과, 과거사를 말로만 반성하고 실천을 못 하는 일본과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 줘야 할 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 한국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베트남 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총리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동안에 정부는 노 대통령님의 공식 방문을 비롯한 한·베트남 정상외교 계기에 과거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베트남 평화재단 추진은 그 설립의 필요성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어제오늘 계속 한미 FTA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간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분이 맹비난을 하는 일이 터져 가지고 시끄러운데,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국가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는 FTA를 찬동하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보는 시각과 또 그런 결과로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일 의원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사이에도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으니 국민이 되게 불안하지요.

우선 한미 FTA 협상은 누가 먼저 요구했습니까? 미국이 했습니까, 한국이 먼저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것은 저희가 2003년에 한미 FTA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외교부와 미국의 통상 당국 간에 FTA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의견교환들이 있었고 연말과 연시가 돼 가면서 양국 간에, '한미 FTA가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강창일 의원 미국은 2001년에 이미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강창일 의원 그런데 지금 대행께서는, '우리들의 자발적 요구였다, 미국이 여기에 응하는 꼴이었다'라고 들립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희는 이미 2003년에 여러 경제 단체들이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들도 했고요. 그동안에 약 일고여덟 개 정도의 FTA에 연관된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이 2001년에 했던 것은 통상 당국은 아니고 ITC라는 미국의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산업, 미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연구를 하는 일환으로서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는, 통상 당국,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최근까지 크게 관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일 의원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관심이 없다, 현재까지 관심이 없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예를 들어서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우리의 자발적 요구가 국민적 컨센서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는 한미 FTA는 그대로 결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강창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협상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완 대책을 같이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언론에 4대 선결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같은 쪽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성과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각의 사안을 보면 한미 간의 오랫동안의 개별적인 통상 현안들입니다. 쇠고기 문제도 거의 1년 넘게 식품안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원래 수입을 하고 있던 것을 수입을 재개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 왔던 것에 대한 결론이고 환경 자동차 문제도 그것은 1만 대 이하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자나 수입자에 대한 공통의 조치고요.

○강창일 의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오랫동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한미 FTA에 대한 양국 간의 기본적인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강창일 의원 그 정도,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한미 FTA의 전제로서 4대 선결 사안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한미 간에 통상 현안의 해결을 하고 그리고 좀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FTA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의원 언론보도에만 의하더라도 참여정부가 2004년도까지는 한미 FTA에 소극적이었는데 개방론자들, 특히 우리 대행을 중심으로 한

개방론자들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급선회했다고 하는 설들이 아주 난무하더군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개방론자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창일 의원 아니, 그런 설이 난무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만에 하나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손익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주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봐 주세요. 어디가 이득 보고 어디가 손해 보고, 어떤 분야……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거기에 대한 좀더 세밀한 연구와 결과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더 국민들한테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또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양국 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우선 투자 분야는 현재보다도 투자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입니다. 특히 섬유라든지 경공업 제품들의 관세율은 미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대해서만 철폐가 되면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서비스 쪽은 좀더 한미 간에 이러한 투자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외화가, 이런 고급 서비스를 위해 해외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모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고 또 전제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는 좀더 부분 부분 들어가 가지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 결국 우리가 보완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분야는, 특히 농업과 같은 분야이지요. 보완대책을 좀더 면밀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일 의원 한미 FTA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겠지요. 계량화하기 힘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환경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농민과 영화인들의 반발도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결국 투명성의 제고와 그리고 한미 FTA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을 좀더 명확하게, 부분 부분 관련되는 분들한테 명확히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또한 국민적 합의 도출도 하지 않고 몰아붙이기식의 협정 체결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되지도 않습니다. 고도로 유연한 외교적 정치력 그리고 국내적 합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강창일 의원 그다음에 제주도 감귤산업 관계, FTA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중이 지역 총생산의 14.7%에 달합니다. 1차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서 제주 감귤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 관세를 유예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품목별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농산물 품목으로서, 하여튼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예, 제주도 감귤 농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렌지 생과와 농축액 수입에 따른 정부의 관세수입이 연평균 1000억에 달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강창일 의원 그런데 감귤산업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은 2006년 기준으로 80억밖에 되지 않습

니다.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관세수입 1000억을 제주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 부분은 지금 한미 간에 FTA뿐만 아니고 또 WTO에서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시장 개방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밀히 분석해서 추가적인 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관세수입 받아들인 것, 다시 황폐화되어 가는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차관님이 나오셨군요.

차관께서는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한국의 영토주권 침탈 시도라는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기도에 대해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번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우리 대한민국은 대미 정책은 있어도 대일 정책은 없다고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밀실 외교만이 일본에 관한 한 있어 왔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임기응변식 대응, 미봉적 대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일 정책 실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우선 그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국제법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처해 왔다고 봅니다.

작년에 특히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취한 조치만 해도 국가안보 상임위원회에서 대일 정책기조를 검토해서 성명을 발표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역사·영토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단 설립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외교부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런 문제에 관한 한 대일 강경론은 있는데, 그것만이 대일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대일 정책,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지금 한일 간의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봤는데……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문제는 참여정부가 아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외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꽁꽁 막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됐습니다.

독도와 교과서 문제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강창일 의원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문제인데,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한일어업협정이요?

○강창일 의원 신한일어업협정……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어업협정이요.

○강창일 의원 예.

정부 측에서는 어업협정과 영토주권 협정은 별개이므로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러나 학계에서는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꼴이, 결론적으로 되어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에 대해서, 더욱더 주권 확인에 대해서 명분을 잃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데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구실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어업협정에 특별히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이것은 경제수역에 관한 경계 획정에 관한 것이지 영토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아서 그래요.

좋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이고 그 사실을 확고히 하려면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빌미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개정하든지, 파기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래서 독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협정 체결이나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도 별도의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한국 영토라고 하든지,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 저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강 위원님……

○강창일 의원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훼손 여지를 바로잡는 재협상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지요. 일본에서는 옛날에 명치(메이지)시대 때에 불평등 조약 하나 고치기 위해서 한 4, 50년 노력하고 전쟁을 치러서, 청일전쟁 치러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키기 급급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 전혀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한일협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그런 식의 학문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한일협정 고쳐 보자는, 개정하자는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학자들만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일본인 합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많은 전쟁 범죄자들이 군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에 강제 징용당하여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영령들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 호국의 신으로 무단 합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유족들의 합사 해제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외교적 지원과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재작년에 합사 해제 촉구 결의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동안 유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 간 접촉 계기에 합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야스쿠니신사 측에서는 합사 해제 자체를, 일본의 유족들 자체가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법원의 이런 것에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한국 외통부에서 일본 정부에 어떤 식으로 노력해 왔는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자료 한 부 보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일본 수상의 어처구니 없는 신사 참배가 지속되고 있고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도 아주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을 꾸짖고 설득하여 신사 참배 중단을 이루어 내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동북아 평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판만 했지 일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고 하는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잘 해 주십시오.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뀐 것은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관심이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옮겨졌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역사 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외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는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이용상 왕자는 고려로 망명해 화산이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알면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이미지가 우리의 수출 증대라든가 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문화 외교라는 것을 정치안보외교, 통상외교에 이어서 외교 활동의 3대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인원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좀더 착안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또 하나,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현지어가 매우 중요하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의원 지금 외교통상부 대부분 외교관들이 영어만 쓰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의 75% 정도가 영어 외에 제3 외국어를 하도록……

○강창일 의원 하도록?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강창일 의원 제가 지난주부터 외교통상부에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 퍼센티지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통계 자료조차 없다고 합디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아니, 너무 한심한 것 아닙니까? 대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가 현지어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여기 지금 파악한 자료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028명 중 불어가 239명, 서반아어가 150명, 일본어가 226명, 중국어가 146명, 아랍어 46명, 러시아어 75명, 독일어 120명, 포르투갈어 18명, 기타 특수외교어가 8명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래서 아마 시험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각 대사관에는 현지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프랑스 정도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어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영어에 의존하게 되지요.

이제는 선진 외교, 한 단계 질 높은 외교를 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일본은 아프리카의 자그마한 나라에까지 현지어를 쓸 수 있는 외교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문제하고 일본하고 비교해서 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강창일 의원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비군 100만 명과 민방위 200만 명을 당장 감축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 200만 명 감축하자고 하는 민방위 혁신 방안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서……

○강창일 의원 알고는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강창일 의원 외교·안보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서 예비군들도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대에야 예비군 규

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평화 진전을 위해서도 현재 예비군 병력 300만 명을 200만 규모로 감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개혁2020에 현재 305만 명의 예비군을 150만 정도로 작전 소요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시간이 돼서 질문은 이상 마치고, 통일부에도 할 게 있는데 이종석 장관께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일 양국은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우호의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 민간인 집단학살, 그리고 공권력의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 규명을 기초로 국가의 권위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일본의 올바른 과거 청산을 촉구하여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올바른 과거 청산과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아시아가 100년 전과 같은 패권 경쟁의 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 편에 섰던 베트남전쟁 관련 과거사를 정리하고 반성하며 양국 희생자들의 피해를 치유하여 질 높은 평화 번영의 한·베트남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대결과 분단을 종식시켜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한미 FTA라는 파도는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 산술적인 통계 수치만을 갖고 한미 FTA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협상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선진 한국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상생과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2개의 커다란 수레바퀴입니다. 모든 것을 이념 대결로 보는 과거의 낡은 잣대 대신 상생과 화해를 이루는 통합의 정신, 그리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혁신의 자세만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국제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상생의 외교와 국방혁신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선진 한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덕규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 문제가 초미의,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어제부터 동료 의원들께서 한미 FTA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오늘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대행 나와 주시지요.

한미 FTA 문제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입니다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한 절차규정이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어떤 규정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외교통상부에서 만든 규정입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FTA에 대해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대통령 훈령 제121호로 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추진이 규정대로 준수되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딴 사항들은 절차대

로 또 규정대로 됐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공청회가 일부 참여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권영길 의원 규정에 보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데 미리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공청회 일자로부터 2주 전에 공고를 해서 2월 2일 오전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길 의원 공청회를 언제 어디서 개최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2월 2일 아침 10시에 코엑스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공청회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전체적인 보고를 하려는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제대로 못됐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권영길 의원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 나온 대로 따르더라도, 이것은 외교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것입니다. 공청회가 중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공청회가 무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심의 의결은 장관들로 이루어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권영길 의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공청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 보고서는 누가 제출해야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통상교섭본부가 공청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에서 공청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의원 절차규정에는 '위원장은……' 죽가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위원장은 경제부총리입니다.

○권영길 의원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장은……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아,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권영길 의원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때는 미국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부장이 참여한다기보다는 그 밑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리하는 통상교섭조정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참석 안 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통상교섭조정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석을 안 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본부장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권영길 의원 어디에 가 있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권영길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정확한 출장기간은……

○권영길 의원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공청회 개최일자는 언제였지요? 아까 2월 2일이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2월 2일입니다.

○권영길 의원 그리고 한미 FTA 추진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언제 열렸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2월 2일 오후 5시쯤 열렸습니다.

○권영길 의원 우리 절차 규정에는 공청회는 미리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공청회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한미 FTA 개시 결정을 하는 날 2월 2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해야 될 통상교섭본부장 즉, 한미FTA추진위원장은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될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자는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뭘 했습니까? 워싱턴에서 뭘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날 공청회와……

○권영길 의원 아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뭘 했습니까? 절차규정에 공청회를 미리 개최해야 되고 그 공청회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FTA 개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디에 있었지요? 워싱턴에서 실제적으로 이때 미국대표와 한미 FTA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규정된 절차를 전부 무시한 것입니다.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공청회 그대로 열렸었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그대로 열렸습니다.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순조롭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규정은 절차규정이고 그 절차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열었고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사실이 있었고 그러나 공청회의 결과는……

○권영길 의원 총리대행!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공청회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대행, 묻는데 답변하시고 핵심적 사항을 답변하십시오.

공청회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한미 FTA 추진을 결정하는 당일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고는 관보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것 누가 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 농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이 어제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체결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경제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씨도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세계적 경제학자인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도 한미 FTA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우리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건강권, 환경권, 경제주권, 문화주권, 식량주권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국제경제학자들이 한미 FTA는 '제2의 IMF', '한국을 휩쓸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도 정부는 엉터리 자료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지난 3월 3일 개최한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총리는 이 자료 보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봤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FTA는 곧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는 한미 FTA 연구의 핵심인 대미 무역수지가 없습니다.

다음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제일 중요한 무역수지가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따지고 들었더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총리대행, 이 자료는 보신 적 없나요? 보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많은 검토가 있었고 연구소에서 추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떤 자료가 어떤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가정들이 아마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맨 오른쪽에 있는 중력모형 분석은 한미 FTA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모두는 약 5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역수지가 현재는 150억 불 정도 흑자지요, 총리대행?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를 추진하면 무역수지가 3분의 1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대행, 문제는 이것이 은폐를 넘어서서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가지고……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 은폐·조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대행,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의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역수지에 있어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대미수출은 제조업이 94억 달러, 제조업＋서비스업은 99억 달러 증가가 82억 달러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166억, 172억 달러 증가가 129억 달러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3월 3일자 원본에는 73억 달러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발표된 그 자료에는 흑자 감소가 47억 달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73억 달러를 43억 달러로 감소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자료 4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4월 4일 외교통상부가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는 원본에 있는 무역수지대로 99억 달러, 172억 달러, 73억 불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 주었는데, 외교부에서 이 자료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폐기처분해야 된다, 상실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폐기처분하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3일자가 원본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자료는 어제저녁 말 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지와 제가 공개한 원본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이렇게까지 조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조작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숫자들은 전부 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숫자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느냐 중장기적인 효과를 보느냐,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또 농업 부문의 피해에 쌀을 다른 농산물하고 같이 넣고 관세를 철폐한다고 보느냐, 쌀은 약 400% 정도 관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영길 의원 총리대행, 좋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따로 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대행,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정부에서 발표한 일련의 자료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서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요청할 때 응하시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것은 대외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전제하에서 그런 숫자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알겠습니다.

한미 FTA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조작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자료가 문제가 되자 사전에 관계대책회의가 열렸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제보가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것까지 저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대행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참석……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A는 워낙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매주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한미 FTA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도 준비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장관들도 2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대행, 만약 이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규명된다면 관계자들은 전부 문책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일 의원께서 선결과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총리대행께서는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은 2005년 9월 미국 워싱턴 한미통상장관회담 그리고 2005년 9월, 2005년 한미경제현안정책보고서 때 AMCHAM과 그다

음에 랍 포트먼 미 USTR 대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미 FTA는 우리 공공성 분야 모든 분야가 저촉됩니다. 오늘 그것을 전부 여기서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약값 인하를 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도 그러한 계획을, 약값 인하를……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들을 만들고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데 미국은 한미 FTA 사전협상에서 자국 제약업체의 가격경쟁을 위해 우리의 약값 인하정책 시행을 유보시키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가, 건강보험과 연관돼서 소위 혁신신약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권영길 의원 아니, 미국이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이 통상현안으로서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권영길 의원 미국이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통상현안입니다. 미측에서는 그런 약가 결정 과정에서 외국 제약사들도 참여하고 또 본인들이 수출하는 혁신신약들이 제대로 된 값을 받도록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게 계속 하고 있는……

○권영길 의원 한덕수 총리대행! 어느 정부의, 어느 나라의 총리대행입니까? 미국 정부의 대변인입니까, 한국……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아니, 미국 쪽에서 그러한 요구가……

○권영길 의원 아니, 미국 정부의 대변인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길 의원 미 국회 의회보고서에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 부분은, 저희도 그것을 읽었습니다마는……

○권영길 의원 변명을 해도, 변명을 하셔도 납득이 가게 변명을 하셔야지……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분들이 한미 간의 통상……

○권영길 의원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권영길 의원 왜곡하고 변명하고 조작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추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한미 간의 통상 현안으로서 중요한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약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길 의원 만약에, 미국 국회 의회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미국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정정 요청을 했어야 되지요. 요청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리 보건복지부가……

○권영길 의원 아니, 정정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권영길 의원 정정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전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했으면 그것이…… 정부 대 정부 간의 요청은 문서로 나오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통상교섭본부가 그러한 문제를 전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대행께서 오늘 여기에서 허위발언을 한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제가 통상교섭본부에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추진될 때 또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런데 미국은 지금 병원의 영리법인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아직은 구체적인, 그러한 협상에 서로의 요구를 교환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권영길 의원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요구를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권영길 의원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요구를 하더라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보험의, 공공적·보편적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보험의 성격은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권영길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영리법인 설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개인 보험 체계를 요구한다면, 만약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권영길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요구할 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 국내적으로도 우리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미 FTA와 연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은 지금 한국정부로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권영길 의원 아니지요, 우리 지금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서민들의 의료보험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본적으로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요구하면 거기에 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왜 지금 답변 못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이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때문에 우리 서민의 건강 보호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우리 국민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보편적 건강 보험은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 의원 현재의 보편적 우리 의료 체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권영길 의원 스크린 쿼터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왕의 남자'에 출연한 이준기 씨에게 "자신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총리대행께서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산영화 비율이 60% 가까운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 영화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우리 총리대행, 프랑스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잠깐 근무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OECD 대사로 근무를 하셨던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권영길 의원 프랑스 경우 스크린 쿼터 폐지가 되고 나서 프랑스의 영화가 거의 몰락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는 이미 붕괴된 농업에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방송 모든 부분에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사기업화되어서 지금보다도 몇십 배 이상 뛰어오르게 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한미 FTA가 바로 국가 재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미 FTA에 대한 본질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이것이 국가 총체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느냐가 검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희 민

주노동당, 그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갑 출신의 이화영 의원입니다.

지난 3년여 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 속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자는 목표 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협력체 형성,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축의 비전을 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서 지난해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 미국의 대북 위폐 의혹 제기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난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 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께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한미 FTA가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모든 나라들이 FTA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딴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FTA의 가장 근본은 이러한 가장 큰 미국 시장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의 교역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성장을 늘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대한 우리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별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기본시스템이 되어 있는 의료나 또는 교육에, 이런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산업별 분야에서 한미 FTA가 미칠, 제조업 부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총리대행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선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소형 상용차의 관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미국 시장의 진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세가 철폐가 되면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그러한 자동차를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에서 20% 수준에 있는 품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들이 철폐가 되면 한국의 제품이 딴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화영 의원 결국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FTA가 성사되면 경제성장률은 대략 2% 상승하고, 약 3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선진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의 상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총리대행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는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 그렇다면 예상되는 부작용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결국 이 FTA는 경쟁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개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업종별로 이러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농업 부문 같은 데는 보완 대책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경쟁의 촉진이 지금 선진국의 2분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생산성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여러 고급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국내에 머물게 하고, 또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피해인데 농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역시 보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199조 원 정도의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분야에서는, 쌀과 같은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품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기간을 최대화해서 우리 농업이 적응을 해 가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한미 FTA 체결 시기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체결 시기에 대해서 내년에 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뜻대로 잘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끌어질 것도 같지만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정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미국의 의회가 한미 FTA를 하나하나의 분야분야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 내년도 6월 30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전에 협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까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시한은 분명히 있고, 그러한 시한을 지키도록 원활히 협상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그 시기까지 타결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여러 의원님도 제기를 했지만 저는 좀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7일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남·북·러시아의 3자 철도운영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4년 남·북·러 철도전문가회의가 개최된 지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TKR-TSR 연결을 위한 3국의 협력을 약속하였고, 러시아-북한 구간인 하산-라선 간 55km의 철도를 개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남북한 및 대륙 횡단철도가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교류는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 시 예상되는 유·무형의 기대 효과는 매우 엄청납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 운임을 30% 인상하였지만 부산에서 서유럽까지 해상수송에 26일이 걸리는 것이 18일로 8일이 단축됩니다. 비용도 안정적인 물동량만 확보된다면 TEU당 비용은 해상운송에 비해 8.5%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TSR-TKR이 연결되면 일반 화물 기준으로 2010년의 물동량이 43만 2000t에서 2025년에는 307만 8000t으로 15년 이내에 7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 통과 운임으로만 약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이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북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약 1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이번 철도회담의 중요한 의의는 하산-라선 간 철도 현대화 비용 조달을 러시아 측이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 구간은 대단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이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 노후화된 북한 철도의 현대화 비용은 2001년 러시아 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억 9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측의 대북 지원 시스템으로는 이 정도의 투자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북한 철도의 개량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북한 철도 현대화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남북 간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또 투자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러시아에 제공했던 차관의 잔여분이 약 15억 80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선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직 남북 간에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차관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검토는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그런 문제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금 현재 정부는 OSJD에 가입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OSJD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기존 회원인 북한이 우리 가입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내에 영향력 있는 러시아 등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운영자회의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철도연결 문제라든지 남북경협 문제라든지 대륙교류 확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등장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경제 환경은 급변하며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재편 과정의 안정적 관리,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한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 등 시급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한반도의 지경학적 공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비전을 가진 국가적 어젠더가 지금 현재 책임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집권 초기의 동북아 중심국가라든지 동북아 시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안 관리에 급급해서 그러한 미래지향적 어젠더 세팅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총리대행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사업은 대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라든지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철도 연결사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정세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화영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 반기문 장관께서도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은 국가적인 영예이지만 반 장관께서 관심도 많은 부분 그쪽 부분으로 가 있고,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몇 차례 홍역을 겪으면서 거의 의지가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신대륙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의지가 현저하게 약화되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유념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대륙으로의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미국 일본 등 해양에 경도되어 왔던 국가 발전 전략과 더불어서 대륙과의 관계 증진과 협력 확대라는 새로운 전략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동 러시아와 사할린을 비롯한 북방지역의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의 육로·해양 통합 수송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출범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북한 내에 머물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장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내자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남북한의 협력만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남북 경제권의 통합을 향한 최소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분단되어 있던 동·서독은 단 한 번도 철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도 서독은 동독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서독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상호간 물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적 목표하에 총 20억 1100만 독일마르크를 지원하여 철도 건설을 지원하고, 베를린과 동독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륙철도 연결과 같은 국가적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단위의 구성과 향후 10년 후를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범정부 차원의 기획단 구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획단의 주요 역할은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조사,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 추진 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실무적인 집행능력이 있는 기구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아시대위원회라든지 외교부가 아직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의지를 상당히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구상들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느냐 하는 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실무적 집행을 요하는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획단의 문제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이러한 실무적인 집행 기능까지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업들의 구체화 단계에 맞춰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북아 중심국가라든지,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정권 초기에 제안했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잘 집행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회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교적인 방향에서…… 현안을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은 그런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그러한 현안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은 참여정부 초기에 제안했었던 신대륙 외교정책,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해야 할 일들…… 가령 러시아 측으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한다든가 TSR-TKR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장관께서 어제인가요, 그저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한 대안으로서 북측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지

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비용을 들이고라도 그것을 하겠는데 국민들께서 그것을 수용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것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화영 의원 보도 내용이, 워딩(wording)이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어떤 취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생사 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과정에서 비용이 들 것이고,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화영 의원 저희들이 북한을 방문해 보면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윈-윈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설비, 지금 시기에서의 설비 투자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장관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북한하고의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미래 통일공동체 문제라든가, 또는 짧게는 우리 경제의 공간 확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중요한, 절박한 현안을 푸는 데 이런 문제들이 도움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대북 송전계획이라든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또 남포항 부두 개량사업, 남북 철도·도로 개량사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경제협력을 요청해 온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 자료들을 축적하면서 연구 검토만 할 정도입니다.

○이화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발표된 사업들도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사를 하거나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조사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것들, 지하자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인프라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협력해서 조사한다든가 그것을 의미하신다면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화영 의원 제가 얼마 전에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에서 평양의 당국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종이가 부족해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종이를 좀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이보다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비 투자를 하자 이런 인식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현물 중심이었다면 그런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그런데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식량이나 비료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의원 예.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리고 기타 향후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께서도 원하고 계신 우리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유연성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은 북측이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이화영 의원 이와 같은 SOC 투자를 계기로 해서 납북자 문제라든가 국군포로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지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에 지금 시기에서 상당한 산업기반시설이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 남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이화영 의원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 정부가 북에 대해서 설비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북한 경제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북한도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우리 기업도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이런 나름대로의 상호 선순환적인 이익구조가 나는 쪽으로 정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당면하게는 기업이 북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개성공단 사례같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북에 SOC 투자를 해야 앞으로 남북 관계가, 화해협력·교류가 좀더 강화되었을 때 우리가 북에서 보다 용이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화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차관님, 잠깐……

최근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언급을 해서 국민들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지난해와 달리 사전에 검정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정부는 작년도에 중학교 교과서 검정 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올해에도 검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측에 좀 가르쳐 줄 것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그것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난해에 중학교 검정교과서 내용을 일측이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건 이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화영 의원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과거에 일부 일본의 편향된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본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해 봐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거의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계속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독도 문제, 즉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영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본-중국, 일본-러시아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문제이고, 다만 북방영토라든가 센카쿠열도 이런 것은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같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또 일본 정부에 접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의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해당사국인 러시아나 중국과 긴밀하게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의 대책을 제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런 국제적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분쟁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서

로 일본의 우경화라든가 보수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공유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동의 대응을 한다든가 대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영토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이라든가 역사적인 성격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어떤 입장을 만들기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화영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보면 불필요하게 강경한 부분은 강경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화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리적으로 이익을 얻어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부분은 또 놓치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일본의 극우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국제적인 협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의원 앞으로 한편에서는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현안마다 대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국제적 기구를 통해서 그 국제적인 협의체에서 일정한 성명한 한번 내면 일본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역사 인식의 문제에서는 그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선의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서 지난 2년여 동안 평양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각국의 의회,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주요한 리더들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모든 분들이 21세기는 동북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착된 남북 관계를 넘어 동북아에 평화질서를 만들고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과 기여를 할 것인지 관심과 기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민족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상생과 협력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반도의 신대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자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지난 50여 년간 안보를 지켜온 한미동맹이 있고 또한 역동적이고 개방화된 세계 11위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7000만의 숙련된 인력과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700만대의 재외동포들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긴장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세계 11위의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한미 FTA 추진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유라시아대륙을 향하는 새로운 대륙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접경지역인 중국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와 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한반도의 신대륙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남북 관계 발전 전략은 대륙과의 교류·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새롭게 수립,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에 한정되어 남에서 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호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양자관계에서는 한 발짝의 진전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를 포괄한 보다 큰 국제협력 구조 속에서 철도 연결, 시베리아 송유관·가스관의 한반도 지선 건설 등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식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한정한 대북 지원을 줄이고 북한에 자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이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뒷편의 일반방청석에는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하신 빅토르 끌류스 러·한의원외교협의회 회장 등 다섯 분의 러시아 하원의원 일행이 우리 측 장영달 회장의 안내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 콘다코바 의원은 6개월 이상을 우주에서 머무르신 바 있는 여성 우주비행사 출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류보미르 장 의원은 우리

핏줄인 고려인 출신입니다.

(일동 박수)

의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고진화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고진화 의원의 지역구이신 영등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고진화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여러분!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고진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반도는 대결이냐 평화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창조적 새 질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협력과 교류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미래 평화적인 새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 패권적 경쟁을 넘어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 평화의 네트워크를 열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선호하는 새로운 평화와 화합, 공존을 위한 지역 내 미래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가진 창조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 질서를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평화선도전략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평화선도전략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선도전략을 통해서 금강산특구, 나진·선봉특구, 개성공단과 신의주특구를 연결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을 통해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선도전략의 일환으로서 휴전선 접경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EEC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EEC 프로젝트를 통해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여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끌어 내는 대한민국이 주창하는 아시아의 미래 평화 구상을 제시합니다.

평화선도전략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힘, 아름다움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창조적인 신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의 역사와 부드러움의 힘을 바탕으로 평화선도전략을 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선도전략을 통해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아시아와 세계 신질서 창조에 앞장서야 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평화선도전략의 일환으로 EEC 프로젝트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네트워크 등 전반적 분야의 새로운 실천 구상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화선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EC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진·선봉, 금강산, 개성공단과 신의주특구를 연결하는 북한지역의 종합개발과 남한의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하나가 된 한반도 내에서의 전국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더 나아가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과 일본·미국의 태평양 해양 세력의 가교로서 아시아의 미래 평화 구상을 주도할 평화선도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EC 프로젝트는 남북 접경지역을 3종류의 클러스터, 즉 경제클러스터, 생명클러스터, 문화클러스터의 연결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러한 부분적 남북협력 경험을 전 한반도적 차원으로 확산시켜서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내년 3월부터 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제가 그 부분은 소관, 담당이 아니라 저도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고진화 의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만약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약 6800만 평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이것이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따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국방부장관님한테 질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의 기초하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나진·선봉지역, 그리고 신의주지역, 유라시아 종합적인…… 아까 이화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민족이 뻗어나갈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고진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고진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러한 조치는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와 그리고 저희가 추진해 온 평화번영정책의 나름대로의 결과로서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작게 보면 수도권의 균형적 개발, 특히 한수 이북의 개발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그러한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선도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진화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이것이 무려 6800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토지 구역의 재조정이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정말 우리가 휴전선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여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 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원칙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성이나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플랜하에서 이런 것을 세워야 되고, 또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신문에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으로 발표되는 것도 아니고 1단 기사 정도 되는 라인의…… 한 5단 기사 되는데, 그런 기사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것을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의한 일시적인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따라서 점점 민통선 쪽이 좁아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올렸는데 손학규 지사가 하신 그 영어마을은 MDL, 즉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 떨어진 남방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군사분계선상에서의 긴장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 본래의 권리를 저희들이 돌려 드리는, 거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다시 논의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화 의원 이것은 차후에 또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며, 정확하게 6월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시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종석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래 4월에 방북을 원하셨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논란이나 문제를 감안하셔서 6월로 희망 월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먼저 김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방북을 요청했기 때문에, 초청했기 때문에 큰일이 없는 한 6월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진화 의원 최근에 또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북한에서 전혀 아무런 제안이 없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어젠가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하고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말씀이셔 가지고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6월 중에 김 전 대통령께서 올라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고, 아직 북한이 6월 중 김 전 대통령님 방북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진화 의원 통일부장관이나 혹은 정부 당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특사 제의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없습니다.

○고진화 의원 그러면 자격 문제에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민간인 자격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현재 상태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김 전 대통령님은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6·15 공동선언을 이뤄 내신 분이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원로, 대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진화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고요. 94년에도 클린턴 행정부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김일성 주석과의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그 당시의 핵 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사로 가느냐,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는 책임성과 그 무게와 그 이후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특사로 보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그만한 무게를 실어 주고 전 국민적인 힘을 모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부문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김 전 대통령님이 방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심껏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 드리고 모시지만 특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진화 의원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시면 북·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 6자회담의 상설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21세기 한민족 위상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겠다, 또 김정일 답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굵직굵직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김 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다는 개요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라가시게 되면 그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가닥을 잡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또 저희들이 혹시 협의될 일이 있으면……

○고진화 의원 이것은 "올라가시게 되면"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국민적 여론이 수렴되고, 또 김 전 대통령의 구상이 일정 정도 국민과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정부가 담보해 줘야 되고, 그 과정에 맞게 국민적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북한 쪽에서 초청일자를 잡아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부터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진화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naive)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번영정책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평화번영정책이 아니라 평화위탁정책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치밀한 접근구도를 가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반도를 요리할 계획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 지금 특사로 보내서……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 제시나 또 국민의 뜻을

모아 내는 과정을 하지 않겠다 한다라면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비전이나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평화위탁정책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시고 특사의 자격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정부로서는 아무튼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시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또 여러 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일정하게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진화 의원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상까지 논의되는 회의인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이나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아마 적당한 날짜를 선택하지 않고 판단해 가지고……

○고진화 의원 오늘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남한에서 못 하면 북한의 평양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릴리스(release)를 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통일부장관께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어물어물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구체적으로 오가는 얘기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다고 그게 다 사실은 아닙니다.

○고진화 의원 이따가 최성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언론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가 여당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6자회담이 지금 도쿄에서 동북아협력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일본에서?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고진화 의원 여기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리가 양보하면 부시 정권 내 강경파의 영향이 커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무엇을 양보한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부시 정권 내 강경파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저희들은 북한에게 6자회담 들어오는 조건으로 금융조치 해제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북측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이라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진화 의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천영우 한국대표에게 말한 '북한 양보불가론' 또 '한국 중재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국 중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천영우 대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자회담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요, 저희 정부가 6자회담에서 회담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촉진자적 역할을 하지만 저희가 중재안을 갖고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고진화 의원 아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크리스토퍼 힐같이 어떤 공

식적인 대표적 자격을 가진 그러한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6자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사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성사를 시킬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화 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사가 거의 안 될 것인데 형식적으로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황을 낙관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화 의원 제가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보다 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총리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세요.

한미 FTA 관련되어서 시중에는 정말 'FTA가 아니라 UTA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가 아니라 Unfair Trade Agreement다, 왜 이렇게 불공정한 협상을 우리 정부가 자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현재 4대 쟁점인 스크린 쿼터, 의약품 단가조정, 자동차 배기량 세금,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 문제는 어차피 한미 간에 항상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것을 리뷰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그러한 양국 간의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화 의원 양국 간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이 간절히 바랐던 사항이고 그러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단호하게 우리의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마지노선이나 우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그렇게 물 흐르듯이 수용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까?

세미나를 해 가지고 무슨 협상에 관한 전략과 미국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는데 어떠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4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4개 사안은 FTA하고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고기를 왜 우리가 수입을 금지했습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일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FTA 전체 체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안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수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화 의원 우리나라에 말이지요, 지금 영화배우들을 비롯해서 문화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안을 총리께서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월 7일, 8일 경기도 소재 연수원에서 FTA 사례와 협상 패턴에 대해서 연구하셨지요? 사례 발표하고 토론하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제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고진화 의원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투명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언론보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선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협상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투명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의 비준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진화 의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방호경 연구원 논문 삭제 사안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고진화 의원 그 보고서가 실수로 게재됐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발표를 철회했는데 그런

일이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제기해 놓고 '이것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옳든 그르든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진화 의원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나와서 국민에게 지금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됐다,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이 이 FTA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입장을 발표해 놓고 그다음에 '실수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가(可)든 부(否)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총리대행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발표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처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선 이 사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고진화 의원 제 말씀은 그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하셨으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아 가야지 불쑥불쑥 청와대 전 비서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에서 입장을 발표해 놓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발을 빼고,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고는 받으셨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특별히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고진화 의원 신문에 난 것을 못 봤습니까, 3월 10일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상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은 얘기하면 FTA 효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 안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그 사안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진화 의원 대미수출 확대가 FTA로 제조업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말씀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공식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청와대 전 비서관이라는 분은 정말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졸속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사 다 보셨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 무슨 '반미파와 애국파가 대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인터넷, 언론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FTA, 정말 국민의 의사기구인 우리 국회의 적어도 점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통상절차법이 기다리고 있는데 통상절차법이 국회에 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영길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입법 발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진화 의원 그러니까 이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앞으로 하겠지만 저희 국회에서 결의가, 이것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국회의 견제를 받고 국민적인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협상해 나가야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저는 그러한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시아 미래 평화 구상 속에서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다할 때 글로벌 리더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셨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즐겨 읊으셨던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마침내 후인의 길이

되리니”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평화가 큰 나라 평화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그 원대한 꿈에 국민 여러분의 힘과 의지, 열정과 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창조와 미래,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고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님!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열린우리당의 최성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 외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냉전의 마지막 고도였던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와 연결되어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 미국, 일본, 중국 간의 한반도 패권을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 중입니다.

이 와중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월드컵축구 4강의 기적, 한류열풍을 통한 새로운 문화강국의 위용을 한껏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분단조국의 멍에를 떨쳐내고 통일강국을 일궈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야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격파했듯이 보란듯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강국, 외교강국의 위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정치권만 단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가 평화국회, 통일국회를 향한 중단없는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고 한겨레, 한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두뇌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시면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거치셨는데 막상 해 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최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또 보람이 있습니다.

○최성 의원 길게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 짧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조금 전 현 정국이 갖는 엄혹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전문성, 성실성 특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념적 편향 문제를 극복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최근에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동경에서의 동북아협력대화에 6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동을 두고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조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희망사항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 제목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6자회담 관련해서 다자간 그리고 쌍무적으로 회담이 빈번하게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표시한 적이 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아마 정정보도가 나갈 것입니다. 그 신문에서 전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목으로 냈습니다.

○최성 의원 이번에 동경회동에서 김계관 북측 대표가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으면서는 6자회담에 나가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은 금융제재, 금융조치 문제가 6자회담에 나오는 전제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북한 쪽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은 오히려 금융조치와 관계없이 6자회담에 나와서 여기서 전향적인 대화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러한 노력들을 보면서 오히려 금융조치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이 그 고리를 끊고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그러면 반기문 장관이 해외순방 중에서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6자회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도 여러 생각

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역시 금융제재 문제를 걸어서 안 나오는 것은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고, 물론 모든 국제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나와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최성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위폐 문제도 논의되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문제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것입니다.

6자회담 틀 내에서도 가능하겠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 또 다른 방식도 아마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현 국면에서는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최성 의원 현재 통일부장관으로서, 물론 앞으로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공식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순간에 북측 당국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와 어떤 발언을 하고 싶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체적으로 북핵을 놓고 한다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전체 기조에서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남북한 간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이 지금 있는 이 6자회담 국면에서도 남쪽이나 또는 중국이나 또 다른…… 미국이 예를 들어 좀 믿기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의 말이라도 믿고 나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신뢰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타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의원 지금 장관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네오콘을 포함한 강경파를 돕게 되는 기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

○최성 의원 잠깐만요. 마저 질문드릴게요.

그런 류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김계관 북측 대표는 오히려 북한이 양보하게 되면 미국의 강경파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의 진의와 이런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강경파의 득세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화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해석을 하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김계관 부상 얘기는 북한이 그동안에 위폐 문제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뒤로 가고 나오게 되면 그만큼 강경파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판단을 고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지금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측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입장에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번 동경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힐 대표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은 북·미 양자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무리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는 하여튼 대화는, 그것이 다자건 쌍무건 간에 대화는 협상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의원 과거 6자회담 재개될 때도 얼마나 미국이 최소한의 대화채널조차 복원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다 결국은 북·미 접촉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북·미 간에 이 접촉과 관련해서 미묘한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만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 의원 알고도 말씀 못 하시겠지요.

미국이 북한의 위폐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왜, 이 내용을 국제적으로 공개해서 이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여러 가지 미국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미국의 생각을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 의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위폐와 관련된 북한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불안과 우려 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처럼 결정적인 근거가 없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의 파국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 정부 입장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 북측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선에서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 의원 앞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천영우 우리 측 대표가 동경회의에 가서 첫 일성이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 또 '북·미 접촉 가능성 없다, 너무 큰 기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협상의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시종일관 저자세로 가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거나 미국에 너무 따라가는 이런 비판들,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천영우 대표는 관계국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고뇌 이런 것들이 묻어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지금 합의가 됐는데 주요 의제는 뭐고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장관급회담에서 설정하고 있는 의제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이번에 장관급회담 의제가 여러 가지 평화 정착 문제,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됐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고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6자회담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의제로 따지면 꽤 여러 가지 의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라기보다는 서로 말하는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율을 하고 지금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 의원 북한이 30만t의 추가 비료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의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마 북측에서는 그것을 논의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 제의와 상관없이 지난 4월에 정상적으로 방북해서 핵문제나 또는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김 전 대통령의 용단으로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이 없이 남북 문제가 접근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든 야든 도움이 되지 않고 저는 냉혹한 국민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정부는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북측이 이야기를 해 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 기다리겠다, 저는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틀 속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공식 혹은 비공식 의제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장관급회담에 올라가면 당연히 김 전 대통령님 방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측이 그때 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님 방북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남북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정중동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쁠 때도 한가로와 보이고 한가로울 때도 바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을 올리고 이러기가 어려운 게 남북 관계입니다.

다만 국민들께 저희가 성의 있게 모시고 또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특사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진실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왜 열심히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최성 의원 그동안 북측에서 대남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는 임동옥 씨가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만약에 사실일 경우는 남북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남북대화 창구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이런 의미도 갖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이미 임동옥 제1부부장은, 김용순은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당 대남비서를 겸했습니다마는 김용순 사망 이후에 대남담당 총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성 의원 조금 전에 고진화 의원께서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언론과도 인터뷰를 한 바 없고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대단히 미묘하고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제되고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와 있는 보도와 무관하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지난 3월 27일 개성을 방문했고 또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북경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남북대화에 참여한 바 있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 민화협 관계자, 민경련 관계자는 물론이고 북한 내부 정보에 밝은 중국 및 해외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 또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문제, 6자회담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거나 우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북한 관련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자회담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서울 답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비슷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별도로 들은 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별도로 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가 장소와 때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북측이 그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성 의원 이 정부와 무관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그리고 방금 우리 장관께서 재천명하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진하겠다, 단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성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 보셨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했을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는 남북 관계 전문가로서 아주 높은 평판을 갖고 계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 자체가 어렵고 더욱이 당국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단한다는 것은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의원 평지풍파까지는 아니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러 가지 보수진영의 어떤 반발 또 6자회담의 형국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서울 답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면 당연히 환영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구애받지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런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답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울 답방을 북한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저보다 최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의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고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분명한 흐름들은 어떻든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런 시각이 있다면 굳이 서울 답방을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국민적 합의 속에서 추진할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이미 제안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와야지 그다음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성 의원 오늘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북쪽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의미 있는 경제개혁이나 외교적 조처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이를 테면 부동산 관련 부분이나 외국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구하거나 이런 개정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성 의원 또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북한의 최근 변화와 흐름, 또 우리가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펴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북·중 간의 경제협력의 강화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물론 언론에도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남포 앞바다에 세계적인 수준의 유전이 존재하고 또 북·중 간의 공동협력 합의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직전인 작년 12월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북·중 간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이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인 형태로 수익의 분배구조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북한의 유전 실태 또 북·중 간의 남포 앞바다의 유전개발을 위한 공동합의 내용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꽤 됐습니다마는 유전 얘기가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최성 의원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너지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한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또 중국이 남포 앞바다, 이것은 비단 북·중 간의 해안 문제만이 아니라 남과 연결되어 있는 해안 수역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NSC는 특히 유전 실태, 또 남북 에너지 교류에 대해서 저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께서는 역시 북·중 관계에도 전문가이시고 흐름도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지난해 10월 북한이 민경련을 통해서 삼성에게 신의주특구 개발에 참여했으면 하는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죄송합니다마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최성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훈춘시 2개 기업이 나진항 2개 부두에 대해서 50년 동안 운영권을 확보한 부분은 사실로 알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 어떻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진항을 가지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경전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어떻든 확인됐거나, 또는 충분히 정향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북·중 경제 협력의 강화일 텐데 이런 흐름이 일각의 우려처럼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또는 동북진흥 이런 관련 문건과 연계되어서 북한 경제의 친중국 경제 종속화, 또는 북한의 동북4성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북한 경제와 여러 가지로 더 긴밀해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북한 경제가 개방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보다 더 중장기적인 미래로 볼 때 또 나름대로 우리의 통일공동체와의 이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균형적으로 북한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의원 최근에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문서를 인용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금년 1월에 방중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에게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를 토로했다'는 이런 정보 보고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물으면 모르실 거고……

그런데 이 정보와 무관하게 어떻든 지금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 문제, 인권 문제, 또 마약 문제, 위폐 문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비단 부시 행정부 내의 일부 네오콘 그룹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 자체가 실제로 김정일 정권의 조기 붕괴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요, 그렇게까지…… 물론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미국이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런 전략으로 확정되어 있다 제가 그런 보고나 또는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정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성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외교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원호 협상이 진척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보 부재, 또 현지 정부 관료를 협상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전략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억류의 주체, 또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최신 판단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우리 시간으로 4월 4일 오후에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익일 4월 5일부터 목 금 토 3일간 현지에서 동원수산 대리인하고 소말리아 과도정부 측하고 협상을 의뢰해 가지고 그 과도정부가 납치단체와 접촉을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관료가 협상에 개입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비보도 조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교부 영사담당 대사 외 1명하고를 두바이로 급파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에는 공관이 없어서 인근 케냐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공관에 인력을 하나 증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뒤에서 협상하는 쪽을 자문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 아직 납치단체 측에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과거의 전례로 봐서는 납치단체들이 조금 시간을 끌면서 자기네가 협상의 수위라든가 또 요구하는 금전의 크기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아마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적으로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 특히 미국, 영국,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번 우리 원양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우리나라 선원 여덟 분뿐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아홉, 중국 셋, 베트남 다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가와도 지금 협조를 해 가지고 소말리아 과도정부 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내용은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아직 구체적인 협상 진전은 없습니다.

○최성 의원 예.

황사 피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이 문제가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적이고 결국은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협조 요청과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거나 또는 대책을 요구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우리 정부는 중국 황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양자적인 그런 채널뿐만 아니고 지역환경협력체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미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한 중국 정부와 협력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적인 노력으로서는 지난 3월 말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공동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양국의 환경부 간 황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을 통해서 황사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고, 또 중국의 사막화 지역의 조림사업이라든가 또 생태환경 복원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의 교육훈련 사업 등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자적인 노력으로서는 동북아환경협력고위회의 이거는 한·중·일, 몽골·러시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 그런 다자협의체를 통해서 황사 대응을 위한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지구환경금융의 재원을 활용해서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 의원 예.

지금 대일외교 관련해서 독도 문제 또는 야스쿠니 문제, 기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조용한 외교, 절제된 외교, 그리고 수사가 붙지요.

‘확고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로 애매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조용한 외교에서 단호한 대일외교로 정책적인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지금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마음 속에 새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조용한 외교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흥분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용한 외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본이 소위 바라는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는 그런 저의가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 의원 일본의 우익 진영이 독도 영토 분쟁화를 의도하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펼친다는 외교부의 이야기는 수백 번 들었고요. 정말로 독도 문제, 야스쿠니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특단의 일관성 있는 이런 대책 강구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최성 의원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날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던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통행의 군사적 합의 보장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측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 문제는 그전부터 남북 양측 간에 비교적 순탄스럽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것은 잘 될 걸로 그렇게 기대했던 사안입니다.

○최성 의원 그러면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의 6월 방북이 경의선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실제 북측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 측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기술적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는 현재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확실한 걸 위해서는 다시 실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 의원 예.

지금 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 남북 군사 협력의 최우선 과제를 뭘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관께서는 ‘상당히 손쉬운 내용부터 남북한의 군사 협력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과 관련해서 남북이 군사 부분에 있어 교류 협력의 우선적 과제를 뭘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남북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좀더 평화 지향적인 양국 군사 상황 관리를 통해서 군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군사 실무 또는 장성급회담을 해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의 하나가 서해의 해상경계선에 관한 문제를 북측에서 제의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성 의원 예.

지금 국방부가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물리적인 충돌을 했는데 물리력으로 하면 국방부가 주민을 이길 텐데, 물리력만으로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문제는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오랜 시간을 써 가면서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유효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약 349만 평의 부지를 소위 매수, 80% 가까이는 매수를 하고 나머지 20%는 저희들이 징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 놨는데 다른 그러한 반대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 사업 또는 56개의 미군기지를 16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약 5000만 평에 가까운 미군의 기지를 반납해서 우리 국민들이 쓰게 되는 그런 아주 호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작지에 사는 주민들이 한 130여 가구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전부 다 징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그것보다도 일부 외부의 단체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인

저희들의 소유권 행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저희 권한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미 간에 약속된 용산기지 이전을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 즉 국방비의 가외분을 가지고 데모 방지하는 데 돈을 쓰게 되고 또 길을 다시 막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저희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가 합법적으로 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됩니다.

○최성 의원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중에서 저는 특별히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도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성공단, 파주, 고양 또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평화도시의 건설 이런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국방부가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 의원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는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대사적 요청임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 의원(253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흥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23인)

강기정	강재섭	권철현	김광원
김종률	김진표	김형오	박순자
선병렬	안택수	유시민	이규택
이명규	이미경	이상민	이영순
이해찬	정세균	조경태	천정배
최규성	한명숙	한병도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직무대행	한덕수
통일부장관	이종석
국방부장관	윤광웅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직무대리	상원종
사무차장	전하성

【보고사항】

○의안 제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4. 1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4. 10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6. 4. 10 장윤석·서병수·심재철·이해봉·이계경·김재원·박재완·박세환·박찬숙·황우여·배일도·이인기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6. 4. 10 정부 제출)

이상 3건 4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6. 4. 10 서병수·정갑윤·유기준·전여옥·김충환·김정권·안경률·강재섭·배일도·이주호·이인기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6. 4. 10 김효석·김종인·김홍일·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 6. 1 정형근·엄호성·고경화·박재완·황우여·이인기·이강두·안명옥·신상진·전재희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5. 7. 18 임인배·권경석·김병호·김석준·김태환·김학송·박종근·박찬석·박창달·박형준·서상기·심재엽·안경률·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윤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대안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8. 23 안상수·정종복·유승민·허천·황진하·박승환·허태열·박찬숙·박재완·홍문표·고경화·서병수·김재경·고흥길·유기준·홍준표·김재원·이진구·정문헌·김영선·정화원·이해봉·이혜훈·심재철·정병국·나경원·장윤석·윤건영·심재엽·박성범·안택수·김충환·김태환·고조흥·

박종근·이인기·서상기 의원 발의)

2월 28일 발의자 철회 요구, 4월 9일 철회 됨

○추천서 제출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6. 4. 10 정부 제출)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질문서

(2006. 4. 11 강기갑 의원 제출)